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젠더리뷰

국내외 여성 이슈

- 국외 여성 이슈
- KWDI 동정

01

국외 여성 이슈¹⁾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1. [독일] #MeToo 캠페인을 시스템 변화로 이끌어가는 독일²⁾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 ‘하비 웨인스타인’ 성추문에 성폭력 피해 경험을 고발하는 ‘미투(#MeToo)’ 캠페인이 독일에서는 영화 및 미디어 산업 전반에 대한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베를린 비엔날레로 전 세계 영화계가 베를린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31일, 페미니즘 이슈와 관련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영화 및 미디어 업계에 종사하는 500명 이상의 여성으로 구성된 ‘Pro Quote Film’ 총회가 열린 것이다.

‘Pro Quote Film’의 목표는 남녀평등하고 혁신적인 영화 및 미디어 산업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들은 ‘공적인 계약과 보조금 지원’ ‘공영방송과 영화 기금 관련 기관, 영화학교 등 여러 기관과 위원회’, ‘공공방송사 및 관리직책’ 등의 영역에 50% 여성 할당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공영 방송 및 영화 대학 등에서 매년 성별 모니터링 시행’,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성 평등한 예산 집행’, ‘영화 및 미디어 분야 성 평등을 위한 중앙 상담 및 서비스 센터 설치’ 등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영화 및 미디어 산업 전반에 여성 쿼터제를 요구하는 ‘Pro Quote Film’이니셔티브는 ‘Pro Quote Regie’, 즉 여성감독 쿼터제를 위한 조직에서 시작했다. 2014년에서 설립된 ‘Pro Quote Regie’는 영화 산업 내에서 여성 감독 비율을 높이는 데 일조해왔으며, 이제 이 움직임은 영화 및 미디어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업계 여성들은 여전히 여성들이

1) 국외 여성이슈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국제동향 중 ‘해외통신원’ 주요 기사를 정리한 것임.

2) 저자: 채혜원(독일 해외통신원)

창의성을 발휘하는 핵심 직책에서 보이지 않으며, 너무나 불평등하게 운영되고 있는 산업 전반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니셔티브 설립자 중에는 독일의 시나리오 작가 도로시 쉰(Dorothee Schön), 배우 야스민 타바타바이(Jasmin Tabatabai), 감독 코니 발터(Connie Walther) 등이 있다.

영화 및 미디어 산업의 남녀 불평등은 각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먼저 ‘영화 산업’의 경우,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하는 독일연방영화기금(German Federal Film Fund, DFFF)의 펀드 82%가 남성이 주도하는 프로덕션에 지급됐다. 또한 사운드 분야의 91%를 남성이 차지하고 있으며 카메라 팀은 85%가 남성이었다. 감독의 경우, 남성 감독 비율이 74%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한 영화전문대학에서 공부한 여학생 중 절반만이 영화계에서 일하고 나머지 졸업생들은 일자리가 없어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독일에서 대대적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미디어’ 산업 내 남녀 불평등 정도도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독일 로스톡 대학(Universität Rostock) 연구팀이 총 3천 개의 TV 프로그램과 1천 개의 영화 필름을 분석해 발표한 젠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TV와 영화 속 주요 캐릭터의 2/3가 남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나이에 따른 남녀 격차가 컸는데, 30대 중반부터 남성 출연 비율이 여성에 비해 두 배로 늘어났다. 50세 이상이 되면 여성 출연비율은 더욱 낮아져, 남성 비율 80%에 비해 여성은 20%에 불과했다. 퀴즈쇼나 코미디 등과 같은 논픽션 엔터테인먼트(non-fiktionaler Unterhaltung) 내 남성 비율은 69%였고, 뉴스나 다큐멘터리 등 프로그램에서도 남성 출연 비율은 약 70%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시사교양 분야에서는 대변인이나 대표자의 72%, 전문가의 79%, 사회자의 80%가 남자였다.

현재 독일에서는 심각한 영화 및 미디어 산업의 성별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민간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 지난 2월 19일에는 ‘독일 연방 반차별기구(Antidiskriminierungsstelle des Bundes)’와 ‘Pro Quote Film’, 극장과 영화, TV 업계의 ‘독일연방협회(Bundesverband Schauspiel)’ 주최로 “문화계는 변화를 원한다(Kultur will Wandel)!”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공성을 지켜야 하는 독일영화재단 기금 지원이 남성 제작자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점, 여러 계약 및 주요 역할에서 여성 종사자들이 불평등을 겪고 있는 점 등 다양한 업계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이처럼 독일에서는 업계 여성들이 관련 정부 기관, 동료들과 연대해 영화 및 미디어 산업 분야의 동등한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 배우 야스민 타바타바이(Jasmin Tabatabai)이

“체계적으로 차별화된 구조에 문제제기하는 것에 지쳤고, 이제 남은 것은 시스템 변화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 TV 등 업계 전반에 걸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독일은 업계 시스템 전반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 매체들은 ‘미투(#MeToo)’ 캠페인에서 이어지고 있는 독일 사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낙관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Pro Quote Film’과 독일 정부, 업계 여성들의 연대 움직임이 독일 영화 및 미디어 산업계에 어떤 성 평등한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 참고문헌 •

- ‘PRO QUOTE FILM’ 웹사이트 (접속일 : 2018년 2월 2일) <http://proquote-film.de/#object=page:216>
-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공영방송 (접속일 : 2018년 2월 1일) <https://www.rbb24.de/kultur/beitrag/2018/01/pro-quote-film-frauen-filmbranche-gleichberechtigung-berlin.html>
- 도이칠란트라디오 (접속일 : 2018년 2월 4일) http://www.deutschlandfunk.de/pro-quote-film-neue-initiative-fordert-frauenquote-fuer-die.691.de.html?dram:article_id=409675
- 독일 도이치벨레 뉴스 보도 (접속일 : 2018년 2월 1일) <http://www.dw.com/en/new-german-film-industry-group-calls-for-gender-parity/a-42380040>

2. [독일] 독일, 연방 당국 ‘남녀평등 지수 2017’ 발표³⁾

독일 연방 당국의 여성 고위직 비율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일 연방통계청(Statistischen Bundesamt)과 독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undesministeriums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가 매년 독일 연방 당국의 직군별 여성 비율을 분석해 발표하는 결과에 따른 것이다.

‘독일 남녀평등 지수 2017’에 따르면, 현재 독일의 총 24개 연방 당국 중 19개 당국의 여성비율이 작년에 비해 증가했다. 지도층 내 여성 비율은 35.3%이며, 이는 지난해에 비해 1.3% 증가한 수치다. 여성 공무원 승진 비율도 지난해에 비해 4% 증가해 58%를 기록했다.

3) 저자: 채혜원(독일 해외통신원)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성 직원 비율은 높은 편이지만 여전히 고위직 여성 비율은 낮다. 2017년 6월 30일 기준으로 23개 독일 연방정부기관(독일연방은행 제외)에서 일하는 직원 수는 2만 5천 451명이다. 이는 장관직을 비롯한 고위직, 일반 공무원, 시간제 근무자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중 여성은 1만 3천 668명으로 전체 직원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가 72%로 여성 직원 비율이 가장 높았고 연방헌법재판소(68%)와 연방 보건부(65%)가 그 뒤를 이었다. 23개 독일 연방 당국 중 남성 비율보다 여성 비율이 낮은 곳은 연방회계감사원(BRH) 41%, 국방부(BMVG) 49%, 독일연방은행(BBk) 44% 등으로 많지 않다. 그러나 ‘독일 평등 지수 2017’은 양성평등과 관련한 주요 통계 중 ‘지도층 내 여성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주목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6월 30일 기준으로 상급직 그룹에 총 9,308명이 고용되어 있으며 이 중 46%가 여성이다(독일은 공무원을 채용할 때 ‘직군’을 나눠 채용한다. 크게는 고위직, 상급직, 중급직, 단순직으로 나뉘며 직군별로 다시 여러 단계로 나뉜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경제협력개발부(BMZ)를 제외하고 다른 연방 당국에서는 높은 직무를 수행하는 여성 비율이 전체 여성 직원 비율보다 낮다. 또한 독일연방 기관 중 16개 기관에서 높은 직무를 수행하는 자리에 남성보다 여성을 적게 고용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국방부(36%), 연방회계감사원(38%) 등 당국의 고위직 여성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환경·자연보호·건설·핵 안전부(BMUB)는 고위직의 남녀 비율이 같았다. 상급직보다 높은 고위직으로 가면 여성 비율은 더 낮아진다. 대표직이나 지도부 그룹에는 총 2,532명이 일하고 있으며 이중 1/3이 여성이다. 연방회계감사원(23%)이나 재무부(26%) 등 몇몇 기관은 고위직 여성 비율이 30% 이하에 머물렀다.

카타리나 바를레이(Katarina Barley)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은 “헌신적이고 능력이 뛰어난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있으며, 이들이 고위직에 더 많이 진출해야 한다.”며 “공직 사회는 남녀평등을 위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고위 관리직의 남녀비율의 평등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 까지 독일 연방 당국(독일 연방은행 제외)에 종사하는 여성 중 승진에 성공한 비율은 5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만 봐서는 어떤 차별요소가 있는지 발견하기 어렵지만, 여성 승진율은 부서 별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승진 비율이 낮은 기관은 10%에 머무는 기관도 있었으며, 대체적으로 30%에서 40% 사이 비율로 조사된 곳이 많았다.

‘독일 남녀평등지수(Gleichstellungsindex)’는 공공 및 사적인 부문의 남녀 임원직 비율이 동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입법안 일부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이 법안은 2015년 4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분석 대상인 독일 연방 당국에는 14개 연방정부부처 외에도 연방 대통령 사무실(Bundespräsidialamt),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 연방회계감사원(Bundesrechnungshof), 연방총리공관(Bundeskanzleramt)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참고문헌 •

‘PRO QUOTE FILM’ 웹사이트 (접속일 : 2018년 2월 2일) <http://proquote-film.de/#object=page:216>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공영방송 (접속일 : 2018년 2월 1일) <https://www.rbb24.de/kultur/beitrag/2018/01/pro-quote-film-frauen-filmbranche-gleichberechtigung-berlin.html>

도이칠란트라디오 (접속일 : 2018년 2월 4일) http://www.deutschlandfunk.de/pro-quote-film-neue-initiative-fordert-frauenquote-fuer-die.691.de.html?dram:article_id=409675

독일 도이치벨레 뉴스 보도 (접속일 : 2018년 2월 1일) <http://www.dw.com/en/new-german-film-industry-group-calls-for-gender-parity/a-42380040>

3. [독일] 일·가정 양립을 위해 근로 단축권을 주장한 노동조합의 파업⁴⁾

독일의 작년 경제 성장률은 2.2%였고, 지난 1월 실업률은 사상 최저치에 가까운 5.4%를 기록했다. 이렇게 독일의 긍정적인 모습 사이로 최근 단연 국내외 언론의 큰 주목을 끈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덜 일하게 해 달라’고 주장한 한 노동조합의 파업이다. 어찌된 이유로 이런 주장을 하고 그 파업은 어떻게 끝났을까?

우선 파업을 추진 한 노동조합 IG Metall은 독일에서 주요 금속 및 전기 산업 분야 근로자 약 390만 명을 조합원으로 둔 독일 내 최대 노동조합이다. 대개 노동조합의 파업은 임금 인상이나 복지 처우 개선이 쟁점인데, 이번 파업 및 시위의 의미는 조금 특별하다. 바로 근로자들이 자녀, 부모 등 돌봐야 할 가족이 있어 필요한 경우, 각자 자신의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달라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다. 약 2년간 현재 주당 35시

4) 저자: 곽서희(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간에서 28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고, 이후 원하면 다시 풀타임 전환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었다. 현재 독일에서는 풀타임으로 일하다가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 자체는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문제는 그 이후 다시 풀타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 근로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녀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전환했었는데, 다시 풀타임 근로제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독일 내 노동조합의 파업 명분은 근로자들이 먼저 임금하락을 감수하고서라도 일·가정 양립을 위해 단축 근무를 하겠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IG Metall 베를린 지부장 올리비에르 호벨(Olivier Hoebel)은 파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은 노동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개인적인 삶, 자녀, 그리고 부모가 있다. 노동이 삶의 희생으로 여겨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IG Metall 노동조합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의 자유가 교섭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이는 여성 근로자, 또는 가족 돌봄 문제로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밖에 없는 근로자나 파트타임 이후 다시 풀타임 근로자로 전환하려해도 못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약 6차에 이르는 노사협상 끝에 지난 2월 6일, IG Metall 노동조합과 남서부금속고용주 연맹(Südwestmetall employers' federation)은 협상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임금은 4.3% 인상되고, 조합원인 근로자들은 주 28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원할 경우 풀타임으로 복귀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자녀나 부모를 돌볼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추가 8일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IG Metall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긴 하나, 향후 독일 내 다른 분야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번 노사협상 타결은 젊은 근로자들의 노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도 분석하고 있다. 베를린 소재 Hertie School of Governance의 한나 슈반더(Hanna Schwander) 교수는 Financial Times를 통해 “젊은 나이에 한 직장에 들어와 평생 풀타임으로 일하고 퇴직하는, 그런 모습은 이제 옛날이야기이며, 근로자들은 이제 일과 개인의 삶에 있어 조화를 이루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으로 독일의 다른 산업 분야로도 이번 사건이 파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며, 동시에 한국은 앞으로 가족 돌봄을 위한 주당 근로시간 단축과 일·가정양립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고민해 볼 만한 것이다.

• 참고문헌 •

- BBC (2018), "Germany strikes explained: The long and the short of it," 2018년 2월 1일자, <http://www.bbc.com/news/world-europe-42887425> (접속일: 2018년 2월 12일)
- The Local (2018), "Time over money? Germany's largest union defends 28-hour week," 2018년 1월 11일자, <https://www.thelocal.de/20180111/time-over-money-germanys-largest-union-defends-28-hour-week> (접속일: 2018년 2월 12일)
- Financial Times (2018), "German union wins right to 28-hour working week and 4.3% pay rise," 2018년 2월 7일자, <https://www.ft.com/content/e7f0490e-0b1c-11e8-8eb7-42f857ea9f09> (접속일: 2018년 2월 12일)

4. [캐나다] 2018년 캐나다 예산안과 젠더이슈들⁵⁾

지난 2월 27일 캐나다 연방 정부는 2018 예산안을 공개했다. 연방 재정부 장관 빌 모르노(Bill Morneau)의 연설과 함께 공개된 새 예산안의 제목은 "평등+성장: 강한 중산층 (Equality + Growth: A Strong Middle Class) 으로 공개 전부터 젠더 관점이 상당히 강조될 것으로 예상되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연방정부는 지난 예산안 집행 결과를 젠더 관점에서 평가하고(Gender Results Framework) 이를 바탕으로 새 예산안을 구상하였다고 발표하였는데, 예산안의 기반이 된 자세한 젠더 분석은 연방정부 예산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목이 시사하듯 이번 예산안은 캐나다의 지속적 성장에 방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게 될 때 국내총생산 (GDP) 이 연 0.6% 증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면서, 앞으로 여성의 경제적 역할을 확대하는 정책이 도입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모르노 장관은 27일 예산안 발표 연설에서 제일 먼저 성별 임금 격차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2017년 캐나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78.6% (남성은 86%)에 이르나, 캐나다 여성의 임금은 남성에 비해 연 평균 31% 낮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성별 임금 격차는 30% 인데, 이 격차는 지난 30년간 거의 좁혀지고 있지 않아 최근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에 모르노 장관은 동일 노동에 대해 남녀가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하는 원칙이 지켜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공공부문부터 임금 투명성 (pay transparency)을 검토할 강제성 있는 기구를 신설 할 것을 발표했다.

5) 저자: 김양숙(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모르노 장관은 또한 성별 임금 격차가 여성에게 강요되는 돌봄의 의무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강조 하면서 퀘백주의 모델을 차용해 소득 보조 수준을 높인 남성에게 대한 육아휴가 제 도입 (Employment Insurance (EI) Parental Sharing Benefit)을 발표했다. 아이 돌봄의 의무를 여성에게 전가하지 않음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게 정책의 취지이다. 물론 이미 캐나다의 남성들은 육아휴직을 신청 할 수 있지만, 고용보험 (Employment Insurance) 에서 일정금액을 소득을 보조하고 있는 현 제도는 소득 보조 금액이 너무 적어 보통 남성들이 아예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 하더라도 1-2주 후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퀘백주는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남성들에게 최대 5주간의 육아휴직을 지원하는데, 임금의 최대 70% 까지를 지원하고 있어 참여율이 높다. 2014년의 경우 여타주의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비율이 25%에 그친 반면 퀘백의 아버지들이 육아휴직 참여율은 80%에 이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 정책은 퀘백의 출산율을 높인데도 유의미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확대된 퀘백 모델의 육아휴직 제도는 2019년 6월부터 시작될 것이며 이를 위해 당장 올해부터 주정부의 예산 이 투입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모르노 장관은 이날 아이돌봄에 대한 정책안도 발표했다. 여성이 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을 경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 75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3년 안에 40,000개의 정부 보조로 운영되는 보육 시설을 물론 이미 운영되는 시설들의 이용료를 낮추는 방안 또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40,000개의 시설로는 현재의 보육 난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임을 지적하는 즉각적인 언론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캐나다를 비롯하여 북미 전역을 강타하고 있는 미투 운동(#MeToo) 또한 이날 예산안 발표 연설에서 언급되었다. 모르노 장관은 그동안 공론화되지 않았던 일상적 성폭력이 성평등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 지적하면서 향후 5년간 8천 6백만 달러의 예산을 성폭력 방지(gender-based violence prevention) 프로그램 개발에 투자 할 것 이라 했다. 또한 최근 캐나다 사회에서는 미투 운동(#MeToo)의 물결을 타고 군대나 경찰 등 여성이 상대적으로 희소한 직군에서의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연방경찰 내 성폭력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 및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캐나다의 해외원조 정책은 젠더가 그 중심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페미니스트 국제 원조 (Feminist International Assistance Policy)”라 불리는 캐나다

의 해외 원조 정책의 기초는 2017년에 발표 되었는데, 앞으로는 캐나다의 해외 원조 기금의 80% 가량이 젠더 이슈에 집중해서 투입될 것이라고 한다. 여성의 인권 증진을 통하여 원조국의 가난 해소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 향후 캐나다의 해외 원조 정책의 기초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원조국의 소녀들에 대한 교육, 가족계획 지원, 현지 여성단체 지원 등에 향후 5년간 20억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투입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CBC, New parental leave planned in budget aims to get women into workforce, <http://www.cbc.ca/news/politics/parental-leave-budget-duclos-1.4550492>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Budget 2018: Equality and Growth for a Strong Middle Class, <https://www.fin.gc.ca/n18/18-008-eng.asp>
 Government Canada, BUDGET 2018'S GENDER RESULTS FRAMEWORK <https://www.budget.gc.ca/2018/docs/plan/chap-05-en.html#framework>
 Toronto Star, 'We start with women': 2018 budget unveils new law to ensure men and women receive equal pay, <https://www.thestar.com/news/canada/2018/02/27/we-start-with-women-2018-budget-unveils-new-equal-pay-law.html>
 Toronto Star, Ontario urged to tackle gender pay gap with transparency law, <https://www.thestar.com/news/gta/2017/04/11/ontario-urgently-needs-pay-transparency-law-advocates-say.html>

5. [캐나다] 캐나다 국가 '오 캐나다(O Canada)' 가사 수정과 성평등⁶⁾

겨울스포츠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캐나다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종합 1위를 목표도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하였다. 그런데 이번 올림픽은 또 다른 의미로 캐나다에게 각별하게 기억 될 듯하다. 그 이유는 2018년 2월 7일 평창 올림픽을 하루 앞두고 남성 중심적인 가사로 몇 십 년 간 비판을 받아온 캐나다의 국가가 마침내 수정 되었고 평창 올림픽이 개정된 국가가 공식적으로 제창될 최초의 국제행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1월 31일, 캐나다 연방 상원은 캐나다 국가 '오 캐나다(O Canada)'의 가사를 수정하는 법안 C-210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의 주 내용은 '오 캐나다(O Canada)'의 세 번째 소절에 '모든 그대의 아들들 (in all thy sons command)'을 젠더 중립적

6) 저자: 김양숙(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gender neutral)인 표현인 ‘우리 모두(in all of us command)’로 바꾸는 것이었다. 개정안이 상원을 통과하자 캐나다의 언론들은 일제히 젠더 중립적 (gender neutral) 인 ‘오 캐나다’가 마침내 공식화 되었다고 앞 다투어 크게 보도 했고, 저스틴 트뤼도 (Justin Trudeau) 수상 또한 성평등을 향한 또 다른 한 걸음을 떼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언뜻 사소한 차이 같지만 문제의 대목을 개정하는 데는 수 십년 간 수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의 노력이 있어왔으며 그만큼 이번 개정은 캐나다 사회에 던지는 함의가 크다.

캐나다의 국가 ‘오 캐나다(O Canada)’는 1880년 작곡되었지만 1980년이 되어서야 캐나다의 국가로 공식 지정되었다. 이전까지 캐나다는 영연방국으로서 영국 국가 ‘신이여 여왕을 보호하소서(God Save the Queen)’를 국가로 불러 왔는데, 이는 캐나다 사회의 주류가 영국계인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퀘벡 주민의 40%가 캐나다로부터의 독립을 원한다고 투표할 만 큼 퀘벡주의 분리 독립 운동이 거세지면서 연방정부는 ‘신이여 여왕을 보호하소서(God Save the Queen)’을 폐기하고 불러와 영어 두 버전의 ‘오 캐나다(O Canada)’를 공식 캐나다 국가로 지정하게 된다. 요컨대 ‘오 캐나다(O Canada)’가 국가가 되는 과정은 캐나다가 분리독립 운동을 겪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영국계에서 좀 더 다문화적인 국가로 확립하는 과정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 캐나다(O Canada)’가 국가로 지정된 후 크게 두 가지 대목에 대해 꾸준한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첫째, ‘모든 그대의 아들들 (in all thy sons command)’이라는 대목이 국민의 범주에 오직 남성만을 포함한다는 이유로 페미니스트들의 줄기찬 비판을 받아왔으며, 둘째, 첫 소절에 ‘우리과 원주민의 땅(our home and native land)’이 캐나다 땅의 원 소유주인 원주민들로부터 그들의 땅을 약탈한 캐나다의 역사를 은폐 및 미화한다는 이유로 또한 비판을 받아왔다.

국가에 여성이 배제되어 있으니 이를 개정하자는 캠페인은 이미 1998년 상원의원 비비안 포이(Vivienne Poy)를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호주와 같은 다른 영연방 국가들 또한 남성중심의 국가를 양성 포괄적인 가사로 바꾼 예를 들며 ‘아들들’ 대신 ‘우리 모두’로 문제의 대목을 바꿔 부르자는 운동이 꾸준히 있어왔다. 그러나 비비안 포이 의원이 국가 개정안을 발의 했을 때 왜 성별만을 문제 삼느냐, ‘아들들’이라는 대목의 배제성이 못마땅하다면 그 구절에 어부, 은행원, 엔지니어 등등 각종 직업군들도 넣으라는 여론과 남성 의원들의 반대와 비아냥거림에 번번이 부딪혀 법안 상정이 그녀의 임기 내내 몇 번이나 좌절되었다. 이후 상원의원 낸시 루스(Nancy Ruth)의원이 포이 의원의 바톤을 이어받아

스티븐 하퍼(Stephen Harper) 보수당 정부에서 국가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캐나다 전통을 훼손하려 한다는 여론과 남성 의원들의 엄청난 항의에 부딪혀 또다시 좌절되었고 이후에는 여성 군인들, 올림픽 출전 선수들, 유명인들로 부터의 참여를 받아 캠페인만을 지속하였다.

많은 여성들이 국가 개정을 위해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개정은 아이러니하게도 남성 정치인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2015년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자부하는 자유당의 트뤼도 수상이 집권하자 이듬해 모릴 벨랑제(Mauril Bélanger) 자유당 하원 의원이 다시 국가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루게릭병을 앓던 벨랑제 의원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그 해 6월 하원이 신속히 국가 수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하원 표결 당시 벨랑제 의원은 휠체어에 앉은 채 자신이 발의한 법안 통과를 지켜보았으나 두 달 뒤 별세했다. 보수당 의원들은 국가 개정을 꾸준히 반대해 이번 상원 표결에는 참여조차 하지 않았으나 집권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표결로 마침내 역사적인 국가 개정이 이뤄지게 되었다.

캐나다 여론은 대체적으로 국가 개정을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다만 현재 정부는 수정된 ‘오 캐나다(O Canada)’를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따로 홍보하고 있지 않아 자유당 의원들과 페미니스트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적극적 홍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 참고문헌 •

- Toronto Star, “Canadian athletes reminded about new gender-neutral anthem at Olympics” (<https://www.thestar.com/sports/olympics/2018/02/05/canadian-athletes-asked-to-sing-new-gender-neutral-anthem-at-olympics.html>)
- BBC, “The women who fought to make Canada's national anthem gender-neutral” (<http://www.bbc.com/news/stories-42977303>)
- Canoe, “Liberal MP calls for investment in gender neutral O Canada public education campaign” (<http://canoe.com/news/national/liberal-mp-calls-for-gender-neutral-o-canada-public-awareness-campaign>)

02

KWDI 동정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18년 여성 신년인사회 개최



우리 연구원은 1월 5일(금)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나라다운 나라, 여성이 만듭니다.”를 주제로 2018년 여성신년인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2018년 새해를 맞아 여성계 인사들을 초청하여 새로운 여성정책의 방향 설정과 희망찬 미래를 기약하기 위한 교류·협력의 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2018년 여성신년인사회에는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을 비롯한 여성장관, 여성단체 활동가, 차세대 여성리더 등 30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해외언론인 여성정책 간담회 개최



우리 연구원은 3월 5일(월) 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해외언론인 여성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국 여성정책의 현주소 파악과 여성정책 싱크탱크인 본원 탐방을 위해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CNN, BBC, 월스트리트저널, AP통신 등 해외 및 국내 언론인 28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개헌과 여성대표성, 젠더정치와 동학”국제심포지엄 개최



우리 연구원은 3월 6일(화)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헌과 여성대표성, 젠더 정치의 동학’에 대한 국제심포지엄을 공동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여성의 정치 참여와 관련한 한국과 일본, 대만의 사례를 살펴보고, 멕시코와 프랑스, 캐나다의 성평등한 헌법 개정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곧 있을 우리나라 헌법 개정에 여성의 사회·경제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방안을 어떻게 하면 담을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남인순 국회여성가족위원장님과 국회의원 정춘숙, 국회의원 박주현, 국회입법조사처와 우리 연구원이 공동주최하였고, 행사를 주관하신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연구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일본 오자노미즈여자대학 젠더연구소가 주관하였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초청, 주한 여성대사와의 간담회 개최



우리 연구원은 3월 19일(월) 연구원 본관 3층 회의실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초청 주한 여성대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국의 여성정책발전에 관한 대담(Dialogue on Women's Policy Development)”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본원의 주요 연구활동과 젠더폭력 이슈와 정책을 소개하고, 향후 주한 대사관과 여성대사들과의 활발한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